윤석열 정부 1년과 호남, 5월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호남 관련 대선공약 상당수 미진…인사·예산도

지역 민심 바닥…국민대통합 한 축으로 보듬어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는 호남의 표정이 그리 밝지 않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낮은 지지도가 말해주듯 호남지역의 정서가 예사롭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호남에 대한 애정을 강조했지만, 정작 지난 1년 동안 보여준 것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호남 관련 주요 대선공약들이 겉돌고 있고, 인사나 예산 측면에서도 소외감이 크다.

10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정책과제 가운데 가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광주의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 구축 , 복합쇼핑몰 유치, 전남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이 꼽힌다.

광주군공항 이전사업도 특별법이 만들어져 속도를 내고 있기는 하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정리가 더딘 상황이다.

반면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구축,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설립, 5·18국제자유민주연구원 설립, 익산~여수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인공지능(AI) 첨단농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 등 상당수 공약은 아직 시작도 못했거나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광주~영암초고속도로 구축의 경우 더딘 사업 진행을 보다 못해 민간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까지 했다.

인사나 예산 분야도 아쉬움이 크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번째 단행한 장·차관급 이상 인사에서 광주·전남 출신은 문화부 2차관, 단 한 명 기용되는 데 그쳤다.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배경 설명에, 그렇다면 광주·전남에는 쓸만한 인물조차 없다는 얘기냐며 볼멘소리들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국민통합과는 거리가 먼 이른바 '호남 패싱' 논란이다.

국고예산 확보에 분주한 광주·전남지역 지자체 담당자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중앙부처의 기류가 싸늘해졌다는 얘기들을 심심찮게 한다. 호남에 대한 예산배정이 예전같지 않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가장 눈여겨 보는 이슈는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사를 통해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강조한 바 있다. 5·18은 현재도 진행중인 '살아있는 역사'로, 이를 책임 있게 계승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후손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출발이라는 언급도 했다.

특히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1월에는 국립5·18묘지를 찾아 "헌법이 개정될 때 5·18정신은 반드시 전문에 올라가야 한다"고 못박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헌법전문 수록 논의는 전혀 진척이 없다. 오히려 여당의 어느 최고위원이 '5월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 국민의힘의 서진 정책에 과연 진정성이 있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5월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은 그 자체로 의미가 클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의 호남껴안기 차원에서 바로미터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최근 "내년 총선과 동시에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헌법전문 수록은 여·야 대선 공통공약이다. 절차만 남아 있을 뿐 대한민국 국민이면 여·야, 진보·보수, 호남·영남을 떠나 사실상 모두가 동의한 사안"이라고 직격했다.

학계에서도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민주·인권·평화라는 전세계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제 공은 정부여당에 넘어갔다. 출범 2년째로 접어든 윤석열 정부가 강대강 여야 대치 속에 호남을 어김없이 패싱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대통합의 한 축으로서 보듬어 나갈 것인지 주목된다.

김재환 기자

정비자회사 관련해 광양제철소 직원들이 지역 소상공인과 소통 간담회를 하고 있다.

광양제철소, 정비자회사 관련 지역 소상공인과 소통

포스코 정비 자회사 출범을 앞두고 광양제철소와 지역 소상공인의 만남이 이뤄지고 있다.

9일 광양제철소는 포스코가 정비 자회사 출범과 관련한 광양·포항 지역 소상공인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연달아 간담회를 열며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체계적인 정비기술력 축적과 운영을 위해 직접 정비 전문 자회사를 설립해 정비작업의 체계화에 나설 계획이다.

협력업체 직원들을 자회사 직원으로 고용해 정비작업 간 위험 요인 해소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포스코는 이를 통해 기업의 안전수준을 높이는 사회적 요구에도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기존 협력사와 거래해 온 지역 소상공인들은 거래 규모 축소에 따른 매출 감소 등 이유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또 협력사의 개수도 현저히 줄어들며 고용 우려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포스코는 소통을 강화해 이 같은 불안감을 해소할 계획이다.

신설되는 정비 자회사가 기존 협력사들과의 상세 거래내용을 파악해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없게 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여순사건 유족 고령화…전남도, 사실조사 속도 낸다

전남도, 조사방식 개편…사건 발생지 시·군서 조사 실시

전남도가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의 고령화로 인한 진실규명 조사에 속도를 낸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는 희생자 유족의 고령화로 신속한 사실조사가 필요해 조사방식을 전면 개편키로 했다.

기존 신고서류를 접수한 기관에서 사실조사를 하는 방식을 변경해 사건 발생지역 시·군에서 사실조사를 하고, 전남도는 시·군 조사 내용을 추가 보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조사방식 개편으로 일부 시·군에 집중됐던 사실조사를 분산하고 시·군의 사실조사 결과 미비점을 전남도 전문조사관이 보완해 사실조사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중앙위원회에서 신속하게 희생자·유족결정(형식요건 심사)을 실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여순사건 위령사업 추진 등 종합계획과 중장기적 발전 방향 수립을 위해 '여순사건 위령사업 마스터플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여순사건을 국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여순사건 다크투어 전국화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국민적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고, 오랜 세월 고통 받은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명예 회복에 나선다.

윤연화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조사체계 개편 등으로 희생자와 유족 명예 회복, 신속한 진실규명에 한발 다가서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단 한 건의 신고가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소중한 실마리가 될 수 있으므로 아직 신고를 주저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꼭 신고하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광주시, 지난해 폐가전제품 3587t 무상 수거

수수료 5억4690만원 면제·온실가스 8399t 탄소 저감 효과

광주시는 지난해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통해 냉장고 등 폐가전 3587t(11만 2488대)을 수거했다고 9일 밝혔다.

폐가전제품 수거 배출 수수료 5억4690만 원을 면제했으며, 냉장고·에어컨 냉매 등 친환경 회수로 온실가스 8399t의 탄소 저감효과를 거뒀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는 이순환거버넌스 배출예약제를 통하면 별도 수수료 없이 수거전담반이 직접 가정을 방문, 폐가전을 수거한다.

수거 뒤에는 재활용센터의 선별·분해 작업을 거쳐 철·구리·알루미늄 등 유용한 자원은 재활용하고, 냉매제품과 형광물질 등은 친환경적으로 처리한다.

수거품목은 원형 훼손 제품을 제외한 냉장고·텔레비전 등 중대형 폐가전과 청소기·선풍기·전기비데 등 소형 폐가전이다. 소형 폐가전의 경우 5개 이상을 동시 배출하거나 중대형 폐가전과 함께 배출할 수 있다.

손인규 광주시 자원순환과장은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는 시민들이 폐가전을 무료로 편리하게 배출하면서 자원순환사회 조성과 탄소중립 실현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슬비 기자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조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고합니다.

1.발전설비용량 : 99.45kW
2.사업개시예정일 : 2023. 05
3.사업운영기간 : 2023. 05 ~ 2048. 04(예정)
4.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2023. 05. 03. ~ 2023. 05. 16. 까지 전남 목포시 미항로 191-4 (2층)
일양산업으로 인적사항과 의견을 기재하셔서 우편으로 송부하시거나, E-mail : ilyang00@daum.net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 발전소명	6. 신청인	7. 용량(kW)	8. 발전소 위치 및 면적	
1	신원1호 태양광발전소	김문수	99.45	전남 나주시 신원리 718-3,-8,-10,-11,-13, 718-14,723-2(7필지)	(1,194㎡/21,044㎡)
2	신원2호 태양광발전소	정행숙	99.45		(961㎡/21,044㎡)
3	신원3호 태양광발전소	조희원	99.45		(865㎡/21,044㎡)
4	신원4호 태양광발전소	김민희	99.45		(782㎡/21,044㎡)
5	신원5호 태양광발전소	박순용	99.45		(810㎡/21,044㎡)
6	신원6호 태양광발전소	윤정숙	99.45		(786㎡/21,044㎡)
7	신원7호 태양광발전소	박지웅	99.45		(852㎡/21,044㎡)
8	신원8호 태양광발전소	서동욱	99.45		(835㎡/21,044㎡)
9	신원9호 태양광발전소	조경선	99.45		(775㎡/21,044㎡)
10	신원10호 태양광발전소	이현경	99.45		(847㎡/21,044㎡)
11	신원11호 태양광발전소	서동현	99.45		(772㎡/21,044㎡)
12	신원12호 태양광발전소	한선자	99.45		(855㎡/21,044㎡)
13	신원13호 태양광발전소	전수권	99.45		(806㎡/21,044㎡)
14	신원14호 태양광발전소	전수권	99.45		(1,214㎡/21,044㎡)
15	신원15호 태양광발전소	조남희	99.45		(871㎡/21,044㎡)
16	신원16호 태양광발전소	김옥수	99.45		(864㎡/21,044㎡)
17	신원17호 태양광발전소	임영덕	99.45		(819㎡/21,044㎡)
18	신원18호 태양광발전소	임연순	99.45		(900㎡/21,044㎡)
19	신원19호 태양광발전소	임연순	99.45		(843㎡/21,044㎡)
20	신원20호 태양광발전소	이동조	99.45		(801㎡/21,044㎡)
21	신원21호 태양광발전소	이동조	99.45		(783㎡/21,044㎡)
22	신원22호 태양광발전소	김효	99.45		(837㎡/21,044㎡)
23	신원23호 태양광발전소	김효	99.45		(813㎡/21,044㎡)
24	신원24호 태양광발전소	양인숙	99.45		(1,159㎡/21,044㎡)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 우 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